

전라북도 익산시 무암로 889신동 344-21 한광대학교병원 5층 1호
 TEL: (063) 859-2400 ~ 2410 FAX: (063) 859-2414

금연상담전화 | 1833-9030

전주매일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2016년 7월 20일 수요일 (음 6월 17일) 제1605호

www.jjmaeil.com

대표전화(063)288-9700



글로벌 우수기업 지정서 수여식에 참여한 기업 대표들과 시상하는 관계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관련기사 6면)

전북도, 지방공공요금 인상 가능성

‘서민들의 부담은 더 커져만 가네’

택시요금·도시가스료·쓰레기봉투값 오를 듯
 도 “아직 인상 여부와 시기 등 결정 안돼 더 살펴야”

지방공공요금 인상 전망에 서민 가계에 부담이 늘 것으로 보인다. 전북도는 최근 공공요금 인상여부 분석을 위해 연구용역을 추진 중이다. 현재 도시가스와 대중교통이 진행 중이며 버스요금의 경우 오는 9월 용역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이와함께 전북도는 택시운송원가 분석과 요금체계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을 위한 예산을 세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택시운송원가 연구용역은 택시요금 인상이 지난 2013년 3월 진행됐고, 업계의 인상 요구 때문으로 알려졌다. 일단 도내 내외부적 상황을 놓고 볼 때 택시요금 인상 가능성이 높다는게 관측자들의 시각이다.

전남과 충북, 제주가 다음 해부터 택시요금을 인상할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국토교통부 훈령에는 2년마다 의무적으로 운송사업 운임과 요금조정 검토하도록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도시가스료 인상 역시 가시권에 들어왔다. 현재 도시가스료는 한국가스공사 원료비와 지역 도시가스회사의 공급비용을 합친 가격으로 결정된다. 도는 도시가스회사의 공급비용을 산정하기 위해 전문 회계법인에 연구용역을 의뢰한 것으로 알려졌다. 알려진바로는 이미 인상요인 결과가 나온 것으로 파악됐다. 도는 내부검토를 통해 인상여부를 결정하고, 관련위원회 심의를 의뢰하

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서민생활과 밀접한 쓰레기봉투 가격도 오를 것으로 보인다. 주민 부담을 13.8% 수준에서 오는 2020년까지 30%까지 높여야 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도가 관리하는 버스와 택시료, 도시가스료들이 줄줄이 인상될 수 있는 현실에 놓였다. 일반 상품과 서비스 요금과는 달리 공공요금은 서민 가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에 서민 부담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도 관계자는 “공공요금 인상 움직임을 전반적으로 지켜보고 있으나 아직 인상 여부와 시기, 인상을 등이 결정되지 않은 부분이 많아 더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신광명 기자

▶ 매일 INDEX

4면 보행자 교통사고 '주의보'

도교육청, 취업 도전캠프 개최

전북도교육청이 취업 도전캠프를 연다. 19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특성화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취업의지 유! 취업스펙 無! 학생을 위한 취업도전캠프'를 운영한다. 이번 캠프는 이날부터 사흘간 남원 중앙하이츠 콘도에서 열리며 40여명의 학생이 참여한다. 각 분야별 실무전문가들이 참여해 전문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실제 취업에 필요한 자료를 작성하고 배우는 시간을 갖는다. 또 학생 개인 포트폴리오 작성을 통한 개인 이력관리를 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도 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캠프는 취업에 대한 의지가 강한 특성화고 학생이라면 취업스펙이 부족하더라도 맞춤형으로 지원을 해 채용까지 연계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기획됐다”고 말했다. /고민형 기자

상습 성희롱 경찰관 파면

경찰, 기강확립 대책 추진

오늘부터 한 달간
 특별복무점검 실시

음주비위·갑질행태
 근절 대책도 시행

경찰이 최근 발생한 부산 학교전담경찰관 사건, 여성청소년과장의 부하 여직원 상습 성희롱 등과 관련해 기강 확립과 조직분위기 쇄신을 위한 특별복무점검과 태스크포스 운영을 진행한다.

경찰청은 19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미군동 경찰청사에서 '전국 지방청 차장 및 청문감사담당관 연석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강신명 경찰청장과 이철성 차장을 비롯해 감사관 및 전국 지방청 차장(1부장), 청문감사담당관 등 60여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오는 20일부터 한 달 간 경찰청·지방청 감찰을 비롯한 청문감사위원을 총동원해 '특별복무점검'을 실시하고 경찰청·지방청 차장 등을 팀장으로 하는 '관서별 기강확립 TF'도 운영키로 했다.

우선 경찰은 복무기강 확립 특별대책을 수립해 상습 성희롱을 성범죄에 준해 파면이나 해임 등 징계, 직무고발 등의 조치를 하고 모든 성(性)비위자를 다른 지방청으로 강제 발령하는 등 강도 높은 '성비위 근절 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여성 민원인 및 성·가정폭력 사건 건관계자와 사적 만남 금지, 신고자 익명성 보장 및 희망지 발령 등 피해자보호 철저, 성 인지력 제고를 위한 교육 강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특히 부산 학교전담경찰관 사건에서 사직서를 받아 비위 당사자를 의원면직 처리했던 행태를 개선하기 위한 대책도 내놓았다.

경찰은 앞으로 의원면직 처리가 필요한 경우 소속 기관 뿐 아니라 상급 기관의 청문기능, 과거 5년 간 근무관서 등을 대상으로 제한 사유가 있는지 확인한 다음 '검증위원회'를 통해 최종 심사한 뒤 처리할 방침이다.

만일 작은 비위라도 발견될 경우 '선징계 후면직' 조치를 해 객관적이고 공정한 면직처리 절차를 준수토록 한다는 취지다.

이와 함께 각 관서별 음주자 등 인적 취약요소를 집중 관리하고 비위가 우려되는 자들에 대한 예방활동을 활성화하는 등 음주비위·갑질행태 근절 대책도 시행한다.

강신명 경찰청장은 “최근 부산 SPO 사건을 비롯한 각종 고비난성 비위가 빈발해 경찰이 신뢰의 위기에 직면해 있는 만큼 성비위자 근절을 위한 노력과 비위면직자 처리과정 모두를 국민의 눈높이에서 보다 엄정하게 처리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지금은 변명하기보다 진지한 반성이 필요한 때임을 명심하고 지방청장과 경찰서장 등 현장지휘관을 중심으로 이번 기강확립 대책을 실효성 있게 추진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인진수 기자

더민주, “사드, 원점 재검토하라”... 논전 가능성

더불어민주당이 사드(THAAD) 배치에 대한 향후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만든 사드대책위원회에서 '사드 원점 재검토' 주장이 나와 논란이 일고 있다. 김종민 비상대책위 대표 등 지도부가 사드 문제에 신중론을 견지하는 가운데 이같은 주장이 나왔다는 점에서 향후 지도부와 소속 의원 간 치열한 논쟁이 벌어질 가능성이 커졌다. 홍익표 의원은 19일 국회에서 열린 사드대책위 회의에서 “정부가 남북 대화, 중국과 러시아 사이의 외교적 노력을 통해 한반도 평화와 동

북아시아의 새로운 미래를 열도록 사드 배치를 철회하고 원점에서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상호 원내대표는 “핵무기를 개발하는 북한을 상대로 그 이상의 역지력을 확보하는 게 실질적으로 불가능할 수 있다”며 “한반도 평화 정책이 지금 무엇보다 시급하지, 핵을 누를 무기를 도입하는 준비 경쟁이 우리가 택할 정책의 최선이 아님을 다시 강조한다”고 사드 도입보다는 평화 정착 노력이 필요하다는 입장에 힘을 실었다. /박용주 기자



2017 전북 무주 WTF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6.22-30 (9일간)